광주·전남 저소득·청년 4300명에 일자리

광주 41억·전남 103억원 투입 '일자리 제공 사업'

광주 485곳에 1400명·전남 600여곳에 2900명 지원

광주·전남지역 내 저소득층 생계 보호 및 미취업 청년 등 4300명에게 직접 일자리를 제공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이 시작됐다.

4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시는 지난 3일부터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 사업 등 2015년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 각각 17억원, 24억원 등 41억원을 투입, 시민 1400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한다.

일자리 제공 사업장은 민간 일자리 85곳, 공공 일자리 400여곳 등 485곳에 이른다.

전남도도 올 한해 지역공동체일자리 사업과 공공근로사업에 각각 34억원과 69억원 등 사업비 103억원을 들여 도민 2900명에게 전남도내 600여 사업장의 일자리를 제공할 방침이다.

재정지원 일자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는 만18세 이상인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이면서 재산이 2억원 이하인 광주시민과 전남도민이면 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에 참여한 시·도민은 1일 평균 5.2시간, 주 26시간 이내까지 일할 수 있으며 월 평균 76만원이 지급된다.

올해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은 지역특산물 상품화사업, 마을가꾸기 사업 등 5대 유형 10개 사업으로 진행된다. 사업 참여 범위도 재산 상한 규정 완화, 신용 불량으로 인한 계좌 개설 제한자에 대한 가족계좌 도입 등으로 확대했다.

공공근로사업은 시·군 실정에 맞는 사업을 선정해 추진하되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과 중복되지 않으며, 고용창출 효과가 크고 청년실업 해소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화추진사업(시·군 행정정보화사업 등), 서비스지원사업(푸드뱅크 지원·공공기관 지원업무 등)을 중점 추진한다.

시·도 관계자는 "국비와 지방비가 투입되는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은 저소득층과 미취업 청년 등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면서 "내실있는 사업 추진을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윤현석기자chadol@kwangju.co.kr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지역 청년들이 직접 청년정책 수립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만들어진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4일 오후 광주시청 중회의실에서 출범식을 가졌다. 윤장현 광주시장과 사회, 문화, 예술 등 각 분야를 대표하는 33인의 청년들이 기념촬영하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젊은이가 살기좋은 광주' 광주 청년위 전국 첫 출범

대학생·시민활동가 등 33명 …취업·창업문제 해결 창구

'청년도시 광주' 실현을 위한 광주시 청년위원회가 4일 출범했다.

광주시는 이날 오후 시청 중회의실에서 윤장현 시장과 청년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1기 광주청년위원회 출범식을 했다. 청년위원들은 시가 최근 공개모집을 통해 응모한 105명 중 33명으로 구성됐다.

대학생 10명, 청년CEO 6명, 취업자 7명, 문화 및 시민활동가 10명 등이며 임기는 1년이다.

청년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에 대한 고민 해결 역할을 맡게 될 위원회의 출범은 광주가 처음이다.

청년위원회는 폭넓은 시정 참여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창업 등 청년 고민 해결의 선봉장 역할을 하게 되며, 분야별 정책과 시정 아이디어 개발, 지역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역할 등도 맡게 된다.

위원회는 또 시의 청년정책 수립 과정에 참여해 일자리, 문화, 복지, 소통 등 각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공동으로 사업계획도 수립한다. 위원회는 국내 다른 지자체 청년위원과의 교류활동 및 해외 청년단체와의 연대활동을 비롯한 청년 의견수렴 창구인 '꿈꾸는 테이블' 운영, 청년아카데미 활동 등에도 나선다.

연말에는 광주시 청년위원 활동보고서도 발간할 계획이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출범식에서 "전국 광역지자체에서는 처음으로 청년정책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하는 등 광주의 미래인 청년을 위한 다양한 시책을 마련중에 있다"면서 "청년의 활력으로 낙후한 광주를 새롭게 바꿔 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광주시는 올 상반기 내에 '청년도시 광주'의 비전과 계획을 제시할 계획이다. 또 전국 최초로 광주청년종합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청년 활동의 거점이 될 광주청년센터도 열기로 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6월 11일은 '동학혁명 기념일'

문광부 '전주화약일' 잠정 결정…일부단체 "근거 없다" 반발

동학농민혁명을 기리는 국가기념일로 '전주화약'(全州和約)이 체결된 양력 6월 11일이 잠정 결정됐다. 하지만 일부 동학 관련 단체와 기관들이 역사적 근거가 없다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기로 해 진통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특수법인인 동학농민혁명기념재단(이하 기념재단)은 지난 3일 오후 대전의 한 호텔에서 '동학농민혁명 국가기념일 제정을 위한 추진위원회 활동 보고회'를 열어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결정했다고 회의에 참석한 단체의 한 관계자가 전했다.

이 안이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확정되면 국무회의에서 국가기념일로 최종 결정된다. 동학 관련 단체들은 이날 보고회에서 6월 11일을 동학 기념일로 정할지를 놓고 투표를 해 찬성 13개 단체, 반대 6개 단체로 통과시켰다. 기권은 1곳이었다.

투표에는 전국동학농민혁명유족회, 천도교중앙총부,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등 전국의 20개 동학 관련 단체가 참여했다.

투표에 앞서 기념재단은 "전주화약은 정부와 농민군이 폐정개혁안에 합의한 역사적 사건으로 동학농민혁명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며 국가기념일로 추천한 배경을 설명했다.

기념재단은 작년 11월 동학유족회, 천도교, 학계 대표 등으로 위원회를 구성해 기념일을 논의해왔으며 최근 전주화약일을 단일 안으로 추천했다.

그러나 갑오동학혁명유적보존회와 동학농민혁명계승사업회 등 일부 단체와 정읍시·고창군 등 자치단체들은 회의 구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데다 전주화약의 역사성이 부족하다며 이를 저지하기로 했다.

서현중 갑오동학혁명유적보존회 이사장은 "전주화약은 체결 여부와 날짜 자체가 명확하지 않으며 실제 6월 11일은 농민군이 관군에 속아 전주성에서 철수한 날일 뿐"이라며 "어떻게 이런 날을 기념일로 하려 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말했다.

서 이사장은 "우리와 의견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힘을 모아 진정으로 의미 있는 날이 기념일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법적 투쟁도 불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정부, 시·도 협력사업 1608억 지원

광주-전북 에너지·자동차 부품 등 전국 16개 사업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시·도간 연계협력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고용을 창출하기 위한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에 올해 1608억원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은 2개 이상의 시·도가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구성한 경제협력권별로 기업, 대학, 연구소가 서로 협력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유망제품을 개발함으로써 기업의 고용·매출을 확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비수도권 14개 시·도가 주도하는 16개 협력산업, 17개 프로젝트를 선정했으며, 프로젝트별로 2~3개 시도가 공동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선정된 16개 협력산업은 조선해양플랜트(경남·전남, 부산·울산), 화장품(충북·제주), 의료기기(강원·충북), 기계부품(충남·세종), 광전자융합(광주·대전), 기능성하이테크섬유(대구·경북·부산), 친환경자동차부품(전북·광주), 휴양형 MI-CARE(제주·강원), 이차전지(충남·충북), 기능성화학소재(대전·충남), 지능형기계(경북·대구·대전), 에너지부품(광주·전북), 바이오활성소재(전남·전북·강원), 자동차융합부품(경북·대구·울산), 차량부품(부산·경남), 나노융합소재(울산·경남·전남)이다.

산업부는 경제협력권산업 육성사업 신규 지원과제를 5일 공고한다. 과제별 지원기간은 최대 36개월이다.

낙도 수산직불금 지원 281→323곳으로 확대

해양수산부는 올해 수산직접지불금(이하 수산직불금) 지원대상 섬 지역을 281곳에서 323곳으로 늘려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수산직불금은 어업생산성이 낮고 생활여건이 열악한 낙도지역 어업인의 소득보전과 생활안정을 위한 보조금으로 올해는 육지에서 8km 이상 떨어진 섬이나, 정기여객선 1일 운항 횟수가 3회 이하이고 연륙교가 없는 섬 거주민이 대상이다.

5~8월 읍·면·동장에게 수산직불금을 신청하면 11월 지급대상을 확정해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어업인들은 지급금 중 30% 이상을 어촌마을공동기금으로 조성해야 한다. /연합뉴스